

정보문화확산운동의 현주소

김 정 원

(한국정보문화센터 본부장)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우리나라는 다가오는 미래사회를 예견하고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미리 찾아서 국가사회에 확산시키는 일은 역사 이래 지금까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의 뒤나 따라가는 형태로 사회가 변화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앓을 수가 없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는 몇몇의 선각자에 의해서 전산화의 효과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전산시스템과 통신의 융합에 의한 정보통신이용기술의 일반화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이것이 정보화운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부터 정보문화확산과 새로운 정보사회에의 적응력을 배양하는 사업이 전개되기 시작하여 어언 10여년의 시간이 흘렀으며, 내년에는 “제 10회 정보문화의 달” 행사를 갖게 되었다.

지금까지 정보문화확산운동의 과정을 돌아해보면 ①10여년에 걸친 정보문화확산운동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식도가 미진하다는 것이다. 이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아직도 우리의 사회현실과 의식구조가 변화되는 사회에의 적응을 머뭇거리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다시 말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기관중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한 것이 큰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다. ②소요재원의 부족으로 전국적으로 동시 다발적인 이벤트가 없음으로 해서 전국민적인 호응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해 볼 수가 있다. 이는 정보문화확산운동의 이해부족과 정보통신업계의 무관심이 빚은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급속하게 진전되는 정보화사회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는 범국가적인 국민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채영신 같은 상록수도 있었고 새마을운동과 같은 국민운동도 경험했었다. 이제는 지식산업사회의 정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국민운동이 있어야겠다. 둘째, 정보통신분야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아이디어를 발굴, 시행하므로서

전국민이 두려워하지 않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겠다. 셋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 사회의 각
단위조직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소요내용은 각각의 단체가
부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의 종합조
정을 할 수 있는 중앙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1997년에는 “제 10회 정보문화의 달” 행사를 기획해
서 운영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뜻깊은 행사에 IPAK회
원은 물론 정보통신분야의 종사자와 전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롭게 전개되는 고도 정보통신사회를 만끽할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